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68
----------	------

발의연월일 : 2024. 12. 20.

발 의 자 : 조승래 · 정준호 · 장철민  
박정현 · 황정아 · 박용갑  
박상혁 · 강준현 · 박홍배  
노종면 · 장종태 · 김현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서,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호국경관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1(호국경관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국립묘지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호국사상 양양을 위하여 국립묘지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호국경관지구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호국경관지구의 지정 절차, 호국경관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12(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 ① 시·도지사는 호국경관지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1조의11(호국경관지구의 지정)</u></p> <p>① 시·도지사는 <u>국립묘지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호국사상 양양을 위하여 국립묘지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② 시·도지사는 <u>제1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시·도지사는 <u>제1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호국경관지구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u></p> <p>④ <u>호국경관지구의 지정 절차, 호국경관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11조의12(호국경관지구 지원사</u></p>

업) ① 시·도지사는 호국경관지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